주간 윈지
Weekly WinG

발 행 일 2026년 11월 9일 (Vol. 115)
발 행 인 (주)윈지코리아컨설팅
연 락 처 (02) 761-0608
사업자번호: 107-87-203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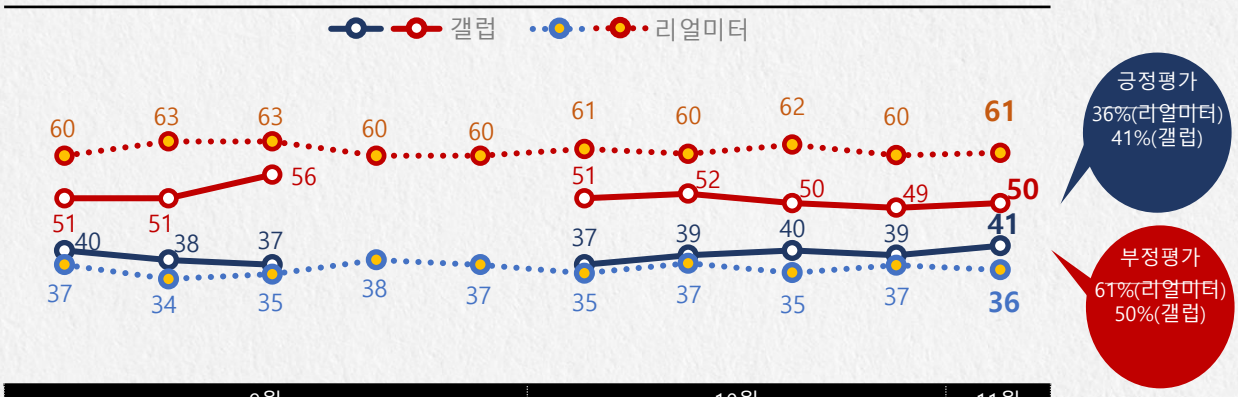
01 금주의 화두 :

▪ 이 대통령은 왜 직접소통에 집착하는가?
- SNS 자제 요청에 '확장형 소통'으로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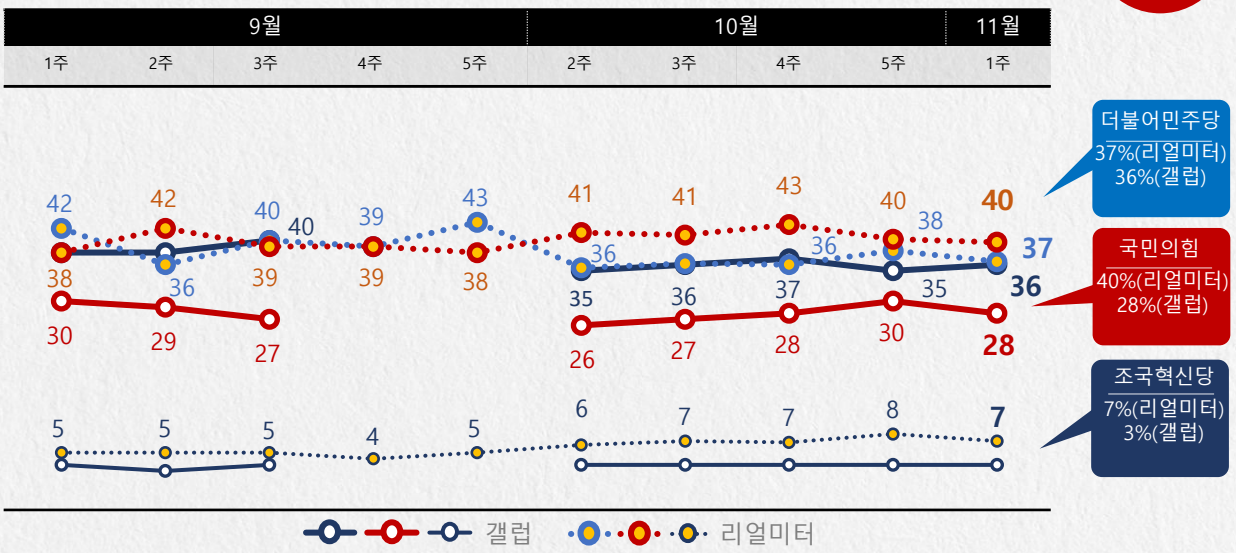
02 주간 여론 동향 (9월 1주 ~ 11월 1주, 갤럽 CATI·리얼미터 ARS)

※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정당 지지도



정치권 주요뉴스

- **(11.2)** 이 대통령,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 약 821조 원 규모 '모두의 성장' 강조
- **(11.3)** 김민석, '3자 비밀연합 증거 없다'며 의총서 사과 / 정청래, 공개 사과·책임 요구
- **(11.5)** 이 대통령, 유튜브 대담 '대통령의 Y' 첫 공개 / 직접소통 채널 확대
- **(11.6)** '조작기소 특검법' 범여권 주도 국회 통과 / 국힘, 표결 불참·규탄대회
- **(11.7)** 국힘, 특검법 반대 장외집회 / 양대 노총, 초광역특구법 철회 촉구 집회

※ 11월 1주차 여론조사 결과 (11월 9일 발표분까지)

		조사개요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정당지지도			
		조사기간	사례수	응답률	긍정	부정	GAP (긍정-부정)	민주	국힘	혁신	(無)
CATI (가상번호)	NBS	-	-	-	-	-	-	-	-	-	-
	갤럽	11/3 ~ 5	1,001	10%	41	50	(-9%p)	36	28	3	(28)
	꽃	11/6 ~ 7	1,002	10%	44	55	(-11%p)	39	37	7	(13)
ARS (RDD)	리얼미터	11/2~6 11/5~6	2,528 1,006	3% 3%	36	61	(-25%p)	37	40	7	(11)
	꽃	11/6 ~ 7	1,008	2%	43	56	(-12%p)	43	39	9	(4)

여론 동향



- [갤럽] 헌법재판소 신뢰: **신뢰한다 49%** vs. 신뢰하지 않는다 36%
  법원 신뢰: **신뢰한다 41%** vs. **신뢰하지 않는다 47%**
  국정감사 평가: 성과 있었다 15% vs. **성과 없었다 46%**
- [리얼미터] 국정평가: 긍정 36%(-1%p), **부정 61%**(+1%p)
  정당지지도: **민주 37%**, **국힘 40%** (양당 격차 3%p)
- [꽃] 내란 관련자 선고(CATI): **강력 단죄 59%** vs. 감형 당연 36%
  내란 관련자 선고(ARS): **강력 단죄 52%** vs. 감형 당연 40%
  김민석 공개 사과·책임 주장(CATI): **공감 64%** vs. 비공감 28%
  김민석 공개 사과·책임 주장(ARS): **공감 61%** vs. 비공감 26%
  민주·혁신 관계(CATI): 합당 24%, **연대 29%**, **독자 노선 37%**
  민주·혁신 관계(ARS): 합당 21%, 연대 23%, **독자 노선 44%**
  청소년 SNS 제한(CATI): **제한 찬성 71%** vs. 반대 28%
  청소년 SNS 제한(ARS): **제한 찬성 66%** vs. 반대 25%

03 정세 읽기

이 대통령은 왜 직접소통에 집착하는가? - SNS 자제 요청에 '확장형 소통'으로 대응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소통은 정치적 생존 경험과 국민주권론이 결합된 통치철학에 가깝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민주당 대표를 거치며 자신을 둘러싼 공격과 기존 언론의 해석을 우회하고, 지지자를 조직하며, 정책을 직접 설명해 온 정치적 생존수단이다. 특히 12·3 내란의 밤 당시 스마트폰 생중계를 통해 국회로 향하는 과정을 공개하고 국민에게 국회로 모여 달라고 호소했던 경험은 그의 소통철학을 더욱 강화했다. 이 대통령에게 직접소통은 정치적 이미지 관리가 아니라, 기존 제도와 공적 소통망이 마비되더라도 국민과 연결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안전장치에 가깝다. 따라서 최근 여권 내부와 언론에서 제기된 'SNS 자제론'에도 이 대통령은 소통을 줄이기보다 유튜브와 생방송을 더하는 확장형 소통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대응이 국정동력 회복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직접소통은 어떻게 국정운영 방식이 됐나

이 대통령은 2025년 취임 당시부터 국민의 주권 의사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지역 타운홀미팅과 기자회견을 확대하고, 국무회의와 부처 업무보고의 토론 과정까지 생중계하기 시작했다. 개인 정치인의 SNS 활용이 대통령과 정부 전체의 운영방식으로 확장된 것이었다. 취임 초기 직접소통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국민은 장관들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고 정책을 토론하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었고, 관료조직에도 긴장감이 생겼다. 타운홀미팅은 지역 현안을 중앙정부에 직접 전달하는 통로로 기능했다.

2026년 초부터 소통의 성격이 달라졌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과 세제, 투기 문제를 SNS에서 연속적으로 제기하며 시장과 정부 부처에 직접 신호를 보냈다. 야당과 언론의 주장을 실시간으로 반박하고 국민의 제보를 정책 의제로 끌어올렸다. 이 시기 SNS는 정책을 설정하고 집행을 독촉하는 통치수단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부동산 문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뒤 대통령 지지율까지 하락하면서 직접소통의 부작용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메시지는 강했지만 결과가 뒤따르지 않았고, 대통령의 짧은 글이 세금·대출·주택정책의 확정적 신호처럼 받아들여지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인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전후한 내부 갈등에서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직접 논쟁에 개입했다. 특정 지지자의 글을 인용해 반박하고, 당내 인사와의 관계를 직접 설명했다. 지지층 통합에는 일정한 효과가 있었지만 대통령과 개인 이용자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습이 조급해 보인다는 우려도 커졌다.

03 정세 읽기

추석 직전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성과에 집중한 나머지 국민의 감정과 불안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앞으로 더 신중하고 세심하게 소통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직접소통을 줄이겠다는 뜻은 아니었다.

오히려 이후 국무회의 공개를 옹호하고, SNS가 없었다면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직접소통을 자신의 정치적 '목숨줄'로 규정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직접 출연하는 유튜브 프로그램까지 시작했다. SNS 자제 요청에 대해 이 대통령은 소통 축소가 아니라 텍스트·영상·생방송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답한 셈이다.

직접소통에 담긴 정치철학

이 대통령은 대통령을 국민과 거리를 둔 근엄한 통치자가 아니라,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공복으로 이해한다. 국민이 존재하는 곳이라면 전통 언론이든 온라인 커뮤니티든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국무회의 공개도 같은 철학에서 출발한다. 정책 결정과정은 대통령과 관료들의 내부 업무가 아니라 국민에게 위임받은 공적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주권자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기존 언론과 정당조직에 대한 불신도 작용한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오랫동안 정치권·법조계·언론의 공격을 받아왔으며, 매개기관을 통하면 자신의 의도와 정책이 왜곡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SNS는 필요할 경우 언론과 정당을 우회해 국민에게 직접 도달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정치 인프라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논쟁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정책에는 이해관계의 충돌이 따르므로 공개적으로 논쟁하고 국민의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것이 더 민주적이라는 입장이다.

대통령 직접소통의 공과 과

직접소통의 장점은 분명하다. 대통령의 판단과 정책 방향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고, 허위정보와 정치적 공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다. 국무회의와 업무보고 공개는 관료조직의 책임성을 높이고 정책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만든다. 기존 언론이 다루지 않는 국민의 제보를 정책으로 연결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말은 일반 정치인의 발언과 다르다. 짧은 SNS 글 하나도 부동산, 주식시장, 외교, 수사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공식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생각이 확정된 정책처럼 해석되면 참모와 부처가 뒤늦게 취지를 설명하는 일이 반복된다. 모든 현안을 대통령이 직접 다루면 장관과 여당의 역할도 약해진다. 장관은 정책 책임자가 아니라 대통령 발언의 해설자가 되고, 민주당은 민심을 전달하고 정부를 조정하는 정당이 아니라 대통령을 방어하는 조직으로 축소될 수 있다. 국무회의 생중계 역시 투명성을 높이지만, 장관들이 카메라를 의식해 솔직한 반론이나 미완성 아이디어를 제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공개회의가 정책 숙의의 장이 아니라 대통령이 장관을 평가하고 질책하는 무대로 변한다면 공개성의 장점은 약해진다.

03 정세 읽기

그럼에도 왜 대통령은 직접소통을 강화하는가

첫째, 직접소통은 이 대통령의 정치적 성공을 가능하게 한 핵심 자산이다. 이를 줄이라는 요구는 단순한 홍보 조정이 아니라 자신의 생존수단을 포기하라는 요구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둘째, 12·3 비상계엄의 경험 때문이다. 그는 국민과의 직접 연결과 국정의 공개성이 권위주의적 권력행사를 막을 수 있다고 믿는다.

셋째, 장관과 민주당의 메시지 전달력에 대한 불만이 있다. 정부와 여당이 현안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판단할수록 대통령은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넷째, 지지율 하락기일수록 매개기관을 우회해 자신의 의도와 철학을 국민에게 직접 재설명하려는 유인이 커진다. 최근 SNS와 유튜브, 약식 간담회가 동시에 확대된 것은 소통을 통한 지지연합 재구축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보면 직접소통은 이 대통령이 잘하고, 체질에도 맞으며, 효과도 검증된 정치수단인 것이다.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대통령의 직접소통은 국민과 권력 사이의 벽을 낮추는 민주적 혁신인 동시에, 국정과 메시지를 대통령 개인에게 과도하게 집중시키는 위험한 통치방식이 될 수 있다. 양날의 검인셈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직접소통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 그것은 정치기술을 넘어 그의 정치적 정체성과 민주주의관에 속하기 때문이다.

향후 대통령의 직접소통은 줄어들기보다 더욱 다변화될 가능성이 크다. SNS, 유튜브 대담, 집무실 생방송, 국무회의·업무보고 공개, 타운홀미팅이 결합된 상시 소통체계로 발전할 것이다. 텍스트 중심의 SNS보다 영상소통의 비중도 커질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직접소통의 지속 여부가 아니라 규율과 책임이다. 외교·안보·금융시장·부동산·인사처럼 파급력이 큰 사안은 최소한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의 문제 제기가 검토 단계인지 확정된 정부 방침인지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직접소통은 이 대통령의 강점이자 장점일 수 있는 영역이다. 현실적으로 그에게 요구해야할 것은 더 정확하게 말하고, 더 신중하게 개입하며, 더 분명하게 책임지는 직접소통일 것이다. 직접소통이 국민의 제보를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고,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며, 장관·여당·언론·시민사회와의 숙의를 강화한다면 이재명 정부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대통령의 모든 생각이 곧바로 국가 메시지가 되고 참모와 장관이 이를 사후 수습하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직접소통은 국민주권의 실현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 중심의 즉흥 통치와 민의의 왜곡으로 평가받을수도 있다.